



대출금리 양극화로 유로존 분열 위험 확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 및 소비자의 대출 금리가 남·북 유럽 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.

-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2012년 9월 현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독일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.
 -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100만 유로를 1~5년간 빌릴 때 평균 대출 금리는 7월 현재 각각 6.5%, 6.2%인 반면 독일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4.0%임.

■ 이와 같은 대출 금리 격차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효과 소진, 재정위기국가의 위험노출 규모 축소, 국경간(cross border) 대출 자제 등으로 재정위기국가의 시중 은행들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

- ECB가 유로존 시중은행에 1조 유로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였던 장기대출 프로그램(LTRO)을 2012년 2월 말로 종료하면서 재정위기국가의 시중은행들은 자금 압박이 커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대량 자금인출 조짐까지 나타남.
- 재정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재정우량국의 시중은행들은 재정위기국에 대한 위험노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함.
 - 독일 및 프랑스의 시중은행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 대한 위험노출액을 2008년 이후 각각 1,519억 유로, 1,697억 유로 감축함.
- 북유럽 국가 금융 감독 당국들은 재정위기국가에 대한 대출 규모를 감축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유로존 내 금융보호주의가 만연됨.
 - 유동성이 각국의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면서 금융시장 분열(financial fragmentation)이 발생

■ 유럽중앙은행(ECB)이 재정위기 심화로 기준금리를 0.75%까지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국가에서는 대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함으로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짐.

- ECB의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재정위기국의 실세 대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함.
- Financial Times는 유로존 내에서 대출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유로존의 붕괴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유로존이 급속한 해체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

(Financial Times, 9/3)